

李 외곽지원 ‘선진국민연대’ 곧 발족

이명박 후보 지지 전국 300개 단체로 구성 지역별 정책포럼...회원만 100만명 넘을 듯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이날 중순께 전국 300여 개 지지단체들로 구성된 가치 ‘선진국민연대’를 발족하는 등 외곽 지지세력 결집을 본격화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날 “당 선거대책위원회 등 공식 선거조직과 별도로 이 후보를 지지하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각종 단체들로 구성된 단일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달 중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진국민연대’는 당내 경선기간 이후 후보를 간접 지지했던 15개 지역별 정책포럼과 보수적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되어 전국적으로 회원수만도 10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직은 특히 대선이 다가오면 이 후보를 집중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여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 맞서는 역할을 해줄 것을 이 후보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선진국민연대는 지난 8월말 ‘핀을 흔들자!(Rock the Vote!)’라는 모토를 내걸고 출범한 ‘2007대선시민연대’에 맞서는 ‘대항마’ 성격”이라며 “당 외곽에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벌이는 한편 이 후보를 겨냥한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방어하는 역

활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조직은 아울러 한나라당 중앙 선대위 산하 ‘국민통합특별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후보 지지세력을 확대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한국사진기자협회 체육대회를 방문, 사진기자 및 가족들과 악수하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기존의 산악회 등 일부 사조직의 경우 선거법 위반 등으로 오히려 선거운동에 마이너스 요인이 됐던 점. 때문에 이 후보 측은 이들 조직을 건전한 시민단체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외곽 지지세력 결집은 후보비서실에서 공동 네트워크팀장을 맡고 있는 박영준 전 서울시 정무국장과의 김대식 동시대 교수가 주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과는 달리 올해는 보수진영에서도 NGO의 연합체를 구성해 지지세 결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라이프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등 300여 개 보수·시민단체들도 이달 초 ‘국민승리연합’이라는 연대모임을 출범시켜 올연말 대선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 광주대 이민원 교수

“차기정권서도 지속 추진할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최선”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민원(50·사진) 광주대 교수는 “참여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어려운 자리를 맡게 돼 기쁨 보다 책임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균형발전 정책은 단순히 한 정권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안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지난 4년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균형발전 정책이



국가 전체를 순식간에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막고 나겠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40년 이상을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던 것을 균형발전 정책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 정책은 이제 고작 4년을 진행시켰을 뿐이며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오는 2012년에야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등 균형발

전정책의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제적인 통계 수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긍정적인 요인이 일부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으로의 순수입 인구는 매년 20만~30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 해에 처음으로 11만명으로 떨어지는 등 균형발전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정부가 국가 정책 전반을 지방 위주로 추진하는 첫 사례인 만큼 분명히 현 정부의 공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모든 정책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만큼 조금씩 생각하지 않고 국민이 계속해서 지지해준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정치권 ‘국감증인’ 채택 힘겨루기

신당 이명박 관련 40~50명 신청...한나라선 “게이트 의혹’ 대통령도 나와라”

국정감사 증인신청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신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를 증인대에 세우기 위해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 후보에 대한 증인신청 세례를 퍼붓고 있고, 한나라당은 신당 아씨와 정운채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게이트 의혹’의 주역들은 물론, 신당 대선주자 3인에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본격화될 상임위 증인채택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기싸움이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상임위 운영 자체가 파행을 겪을 것으로

점쳐진다.

○법사위 “대통령까지 증인신청”=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장은 법사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당은 도곡동 땅 투기 의혹, BBK 추가조각 사건, 위장전입 의혹, 위증교사 사건 관련자로 이명박 후보를 비롯해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도곡동 땅 투기 관련자로는 이명박 후보와 김만재 전 포철회장, 서정원 한나라당 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포함됐고,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유찬 전 비서관과 당시 수사검사였던 주성영 현 한나라당 의원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또 BBK 추가조각 사건 관련자로는 김경준 전 BBK 대표가, 위장전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가 각각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권력형 게이트 사건을 공략 포인트로 정하고 신당아씨와 정운채 전 청와대 비서관, 권양숙 여사, 이병완 전 청와대비서관,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변양근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세홍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정상근 전 부산국제청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당의 정동영 이해찬 손

학규 후보와 오종일 대표, 양길승 경선관리위원장을 불법경선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만복 국정원장과 이웅섭 건교부 장관, 전근표 국제청장을 한나라당 대선후보 개인정보열람 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각각 요구했다.

○정무·재경위 “이명박 관련증인 40~50명”=신당은 BBK 추가조각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와 친형 상은 씨, 처남 김재정씨, 이 후보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서울에크로 사장, 김승유 하나금융투자 회장, 김경준 전 BBK 대표, 에리카 김 변호사와 모두 42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무더기 신청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권력형 게이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하고 정운채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비롯해 부산지역 건설업자인 김상진씨, 정상근 전 부산국제청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한반도 대운하’ 대표 공약 논란

한나라당, 대선공약 발표 이달말로 연기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 후보의 공약 확정 작업을 담당하는 일류국가미래비전위원회는 대운하 공약의 위상과 명칭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운하의 수익성, 환경과 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의 공세가 거센 데다 당내에서조차 “대표 공약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점을 우려한 관계자들이 대운하의 대표공약 이미지 탈색과 명칭 변경 등을 요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약 성안을 지원하고 있는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최근 문건을 통해 “토목 출신 티내느냐”며 대운하 공약을 비판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 반대하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아서 비전위 내부에 선 광범한 대립이 이어져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비전위는 공약의 일괄 발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10일이 아닌 이달 말께로 미룰 예정이다. 연기 배경은 남북 정상회담 여파가 가신 이후 벌여진 후보가 결정될 때쯤 공약을 내놓으려는 의도라는 게 비전

위측 설명이지만 대운하 문제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적지않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일부 주요 공약 2~3개 정도는 10월말 이전에라도 필요할 때마다 단건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게 비전위 측의 설명이다.

대운하의 대표공약 논란과 관련, 비전위는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일단 대운하를 ‘1번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다른 공약을 대표공약으로 대체하기 보다는 대운하를 포함한 10대 주요공약을 같은 비중으로 선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공약을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2007년 “제2회”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

- 유공자 포상 신청안내 -

21세기 소기업소상공인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300만 소기업소상공인의 새 희망과 비전을 주제로한 전국대회 개최를 계기로 자랑스러운 소기업소상공인과 유공 우수단체 및 기관을 선정하여 훈·포상 하고자 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행사개요	일 시 2007년 11월 20일(화) 09:00~18:30 장 소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	기 타	추천대상, 작성방법 및 신청 서류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ba.or.kr)에서 다운받아 활용
행사내용	제1부 - 자랑스러운 모범 소기업소상공인 및 유공자 훈·포상 수여 - “소기업소상공인의 날” 제정 선포식 제2부 - 제17대 대선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 제3부 -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자선 공연 “소기업소상공인의 날” 제정 선포 기념	주 최	「사단법인」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포상종류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중소기업특별위원장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국민은행장표창,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표창,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장표창,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표창	주 관	(주)티에나일
신청대상	□ 자랑스러운 모범 소기업소상공인 부문 - 건전한 기업가정신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기위하여 노력함으로써 타기업에 모범이 되는 포상신청 마감일('07.10.13.)까지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 근거하여 소기업소상공인 범주를 유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소기업소상공인(기업,법인,개인) □ 유공자 부문 - 적극적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육성,연구등을지원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책임자)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공로가 인정되는 국가기관·단체 및 소속직직원	후 원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질서경제학회 (언론) 한국산업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중앙일보, 대전일보, 강원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북일보, 경인일보, 울산매일신문사, 국제신문, 중도일보, 충청일보, 광주일보, 전남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단체) (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사)한국회원협회, (사)대한제국협회, (사)한복진흥회, (사)한국신제품인복지회, 전국공중위생단체협의회, (사)이용사회, (사)대한속박업중앙회, (사)한국요기협회,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사)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사)한국가솔리카렌서협회, (사)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사)고려대졸업자협회, (사)세계중소기업연맹한국연합회
추천(신청기간)	2007년 10월 8일(월)~10월 13일(토)까지 본회 접수분에 한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협 찬	국민은행, (재)한국우편사업지원단 등 기타
		보내는곳	「사단법인」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우121-873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59-3 -포상팀- TEL : 02)717-1221 FAX : 02)717-1005